

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참여정부를 만들어 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참여정부에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그러지 않고도 뒤늦게 참여정부를 지지해서 오신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적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나면 가슴이 자꾸 벅차오릅니다. 그래서 손짓 발짓도 크게 하고 목소리도 크게 하게 되는데 나중에 TV 화면에서 그 모습을 보면 조금 민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며칠을 쓰고 어젯밤 12시까지 쓰고 다시 조금 전 12시 10분까지 썼습니다. 차분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썼습니다.

여러분, 왜 모였습니까?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불의에 대해 분노할 줄 알고 저항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탐구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도를 찾고 뜻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행동합니다. 사람을 모으고 설득하고 조직하고 권력과 싸우고 권력을 잡고 그리고 이렇게 정책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서, 보다 좋은 세상을 위해서 참여정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가 그동안 많이 흔들렸습니다. 지금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참여정부를 흔들고 깎아내리는 사람이, 언론이 있습니다. 여론이 또 그런 언론을 따라갑니다. 참여정부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도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것이지요. 정말 참여정부가 실패했는가, 과연 무능한 정부인가, 정말 한번 따져 보고 싶습니다. 설사 실패라는 평가가 나오더라도 남은 기간 동안 참여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공 여부를 떠나서 살려 나갈 만한 가치가 있고 전략이 있다면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계속 노력합니다. 가치와 전략에 깊이가 있고 체제가 정연해서 능히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쓸 만한 이치가 된다면 저는 이것을 사상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상을 가진 사람은 역사에 가치와 전략의 뿌리를 내리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참여정부에 그만한 가치와 전략이 있다면 역사에 뿌리를 내리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5년 동안 어느 정부라도 실천해야 할 국가의 운영이라는 보편적 사명과 참여정부가 특별히 구현해야 할 가치를 실현할 사명을 받고 대통령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점입니다. 저는 국정운영이라는 보편적 사명은 다음 정부에 넘길 것입니다. 참여정부가 실현하고자 했던 특별한 사명은 이제 여러분에게 도로 넘겨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 나갑시다. 물론 저도 함께할 것입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더 훌륭한 역사를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경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일 시비가 많은 분야이지요. 지난 4년 내내 위기·파탄·실패란 말로 흔들었습니다. 제 대답은 '증거로 말합시다' '지표로 말합시다' 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대한민국」이라는 책자를 보셨을 것입니다. 지표를 모은 책입니다. 보니까, 올라가야 할 것은 다 올라가고 내려가야 할 것은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흔들었던 부동산도 이제 안정될

것 같습니다. 기초체력이 강해지고 경쟁력도 높아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2003년의 위기를 극복하고 유가 상승, 환율 하락을 흡수하면서 거둔 성과라서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가 앞으로도 잘 갈 것인가, 저는 잘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멀리 보면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가 이만큼이라도 살아난 것은 참여정부 정책이 원칙에 충실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접대비 50만 원 신고, 성매매특별법, 부동산 정책 등 이런 정책 하나하나에 저항이 만만치 않았습니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단 한 푼이라도 경기에 부담을 주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참여정부는 그러나 원칙을 붙들고 바위처럼 버티었습니다. 지금 그 분야는 진일보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참여정부의 전략이 적절하고 충실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을 보면 성장동력산업과 부품소재 육성, 금융·물류·비즈니스 허브 전략, 서비스산업과 중소기업 육성, 환경·보건·문화·교육의 산업적 육성 등이 있습니다. 종합적인 국가발전전략으로서 혁신 주도형 경제, 과학기술 혁신, 경영 혁신, 교육 혁신, 정부 혁신과 인적 자원 육성,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능동적 개방과 FTA, 해외투자, 노사안정, 동반 성장, 균형발전, 사회투자, 민주주의, 평화와 안보, 이 모든 것을 '비전 2030'에 담았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으로 체계화했습니다. 구체성이 없다, 재원 조달 계획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지도 않고 하는 얘기입니다.

비전 2030은 그 자체가 중장기 재정계획입니다. 재정계획을 보고 재원 조달 대책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자료를 안 봤다는 말입니다.

참여정부가 계속 간다고 가정하면 우리 경제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우리 국민의 역량을 믿습니다. 시원치 않은 정권이 우물쭈물해도 큰 위기만 오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잘 꾸려 갈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어떤 위기도 다음 정부에 넘기지 않습니다. 어떤 부담도 다음 정부에 넘기지 않습니다. 경제 파탄, 경제 실패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느 정부와 비교해서 실패라는 얘기입니까? 어느 나라와 비교해서 한국경제가 실패라는 얘기입니까? 성장률을 가지고 경제 파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세계적 추세, 다른 나라의 경험 등과 비교해야 합니다. 실제로 성장률이 전부는 아닙니다. 1998년, 2003년 경제위기는 높은 성장률 뒤에 왔습니다. 그래서 높은 성장률이 사고의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장률은 보통 그 정부의 성과가 아닙니다. 6공화국 정부의 성장률은 대단히 높았습니다. 문민정부의 성장률도 꽤 높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두 정부가 경제를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1998년 경제위기는 그때 원인이 축적된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의 성과가 성장률로 나타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살고 있는 반도체, 휴대폰, 그 밖에 여러 가지 수준 높은 기술들은 우리 정부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지난해 수출 3천억 달러를 초과 달성한 것도 다 이전 정부에서 준비하고 성장시켜 온 것들을 저희 정부에서 열매를 따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15년 정도 되면 어지간한 과수 나무는 제대로 수익이 있는데, 그것도 망쳐 버릴 수 있습니다. 그해 거름을 잘못 주고, 약도 잘못 치고, 관리를 잘못 하면 그만 낙과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를 잘하는 것과 성장의 토대를 닦는 것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부의 정책성과는 주가를 보는 것이 훨씬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의 가격은 정책 자체를 평가하고 미리 예측해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 장차 발생할 성과를 앞당겨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를 파탄이라고 얘기하고 7% 성장을 공약하는 사람들은 멀쩡하게 살아 있는 경제를 자꾸 살리겠다고 합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사실을 오해하고 있으니 멀쩡한 사람한테 무슨 주사를 놓을지, 무슨 약을 먹일지 불안하지 않습니까? 무리한 부양책을 또

써서 경제위기를 초래하지 않을까, 좀 불안합니다. 잘 감시합니다.

3만 달러, 4만 달러 공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당연한 얘기를 가지고 생색내고 있는 겁니다. 이미 2만 달러 시대로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올 연말이 되면 2만 달러 시대로 들어갑니다. 3만 달러를 하든, 5만 달러를 하든, 그거 5년 만에 하는 것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시다만, 지금 우리가 수출 잘하고 있는 것은 옛날에 씨앗을 다 뿌리고 가꾸어 놓은 것이고 우리는 관리만 하는 것이지요. 다음의 먹을거리는 우리 정부가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정부, 그 다음 정부는 그거 따먹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만 달러, 4만 달러가 되면 그것은 참여정부의 성과다,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참여정부가 영망을 만들어 놓으면 3만 달러 못 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민정부가 막판에 외환위기를 초래하는 바람에 2만 달러 달성이 더디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3만 달러, 4만 달러로 가면 그것은 참여정부의 공로입니다. 제가 근거를 한번 대보겠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미 FTA가 발효되면 연간 0.6%의 성장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한·EU 간에 무역거래량은 한·미 간 거래량보다 더 많으니까 한·EU FTA를 하고 나면 최소한 0.6% 더 올라가니까 1.2%는 거저 갖고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경제이론을 잘 아시는 분들, 특히 일반 균형이론이나 특수균형이론에 밝은 분들은 제 이야기가 맞지 않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것 안 하면 성장이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놓고 보면 맞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1.2% 벌여 놓았습니다.

참여정부는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의 균형사업을 위해서 2012년까지 기반시설에 56조 원, 지상 건축의 약 45조 원, 합계 101조 원을 투자하도록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청계천 사업비가 3,700억 원, 대운하 사업비가 14조 원이

라고 합니다. 정부 계산은 17조 원인데 이명박 후보는 14조 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17조 원이라고 계산하지요. 페리호 열차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100억 원이면 된다는 분들도 있고 또 1조 원 들어야 한다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다 몽땅그러도 균형발전 투자의 5분의 1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균형발전 투자사업이 우리 건설경기 그리고 경제 성장에 좋은 기여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공사가 시작됐을 때 혹시 노임이나 자재 파동이 있을까 하는 점을 우려해서 건설교통부가 대책을 잘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운하 사업까지 같이 얹어 놓으면 틀림없이 자재 파동 일어납니다.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투자는 마지막에 민간투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청사 이전비 11조 원만 재정 부담입니다. 나머지는 다 회수되는 것이지요. 물론 대운하도 민자로 한단데 누가 대운하에 민자 투자하겠습니까? 17조 원이든 14조 원이든 재정 투자를 하면 재정이 큰일납니다. 그렇게 되면 복지 예산을 줄여야 되겠지요? 줄일 데도 없습니다. 세금 내리자는 것 말고는 아무런 전략도 없이 참여정부의 성과를 파탄이니, 실패니 공격하는 것만으로 우리 경제를 세계 일류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진실입니다. 앞으로 토론이 본격화되면 밑천이 드러날 겁니다. 우리 조기숙 교수님, 토론 한번 하고 싶지요?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헌법상으로 토론을 못하게 돼 있으니깐 단념해야지요. 어디 잘하는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참여정부는 경제를 파탄냈다면 경제대통령이 되겠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어느 정책을 폐기할 것인지 확실하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폐기할 수 있는, 폐기해도 좋을 정책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감세, 작은 정부, 이런 것 말고 다른 정책을 찾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꾸 없는 것을 새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책 많이 써 놓았으니까 그냥 베껴 가십시오. 국가전략을 체계화한 책을 저는 국민의정부 시

절에 처음 읽었습니다. KDI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세 권입니다. 또 짝 있습니다. 우리 언론에게 거듭 거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무현은 흔들어도 우리 경제는 좀 흔들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기론, 파탄론 때문에 주식 안 사고 눈치만 보았던 우리 투자자들, 그 때문에 입은 손해를 누구에게 배상받아야 됩니까? 제가 2004년에 주식형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부동산이 이기나 주식이 이기나 해 보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우리 국민들, 제발 좀 부동산 근방에 있지 말고 이쪽으로 오시라고 했는데, 저는 펀드로 이익을 좀 냈습니다. 좀 덜 남더라도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이 또박또박 나오면 그것 골치 아픕니다.

민생과 복지, 이것이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우선 참여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3년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고통 받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분들에게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점차 나아지고 있으니 참고 함께 노력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로서는 국민들에게 항상 송구스러운 마음이지만 그래도 두 가지 오해는 풀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에서 양극화가 심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고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지표를 조사해 보니까 그래도 참여정부가 어지간히 노력해서 더 나빠지는 것을 붙들어 놓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심해졌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심해졌든 심해지지 않았든 양극화의 책임이 참여정부에 있다, 좀 구차한 말씀 같지만 경제현상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인과관계를 이렇게 함부로 단정하는 논리가 너무 쉽게 세상에서 통용되면 앞으로 우리가 정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

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올바른 논리로 따질 것은 따지고,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 영세자영업 문제 그리고 일자리의 품질이 점차 양극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전체적인 지표는 2004년을 정점으로 지금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내막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하나는 더 나빠지는 곳도 있고 또 좀 좋아진 곳도 있고 복잡합니다. 참여정부의 일자리정책은 일자리 수를 늘리고 품위를 높이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복지정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을 잠시 소개해 드리면 중소기업 육성, 서비스산업, 이전에 없던 새로운 영역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발굴하고 늘리기 위해서 집요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급 일자리를 위해서 금융·물류·기업지원서비스 그리고 문화·환경·건강·교육의 산업화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건강과 교육의 산업화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복지 근본주의를 주창하는 사람들 때문에 진전이 매우 더딥니다. 공공서비스는 공공서비스대로 확충하되, 산업적 영역에서 국가 간 경쟁을 할 곳은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의 산업적·시장적 원리의 도입을 강력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좀 지지부진하고 있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지정책은 재원 배분을 개혁하고 정책의 방법과 수단을 정비하고 전달체계를 확충하고, 그 다음 전체적으로 복지정책을 사회투자전략으로 전환하는 종합적인 전략들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재원 배분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투입을 했다, 가장 많은 성장률을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여정부 들어 국가 재정에서 경제투자와 사회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전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교부금 가운데 복지·환경 쪽의 비중을 매우 높였습니다. 그래서 지방 재정 차원에서 재원 배분의

큰 전환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책에 있어서는 돈을 지급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서비스를 개발해서 서비스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에서부터 학생, 그리고 여성·노인·장애인 각 영역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발굴해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발굴사업은 바로 사회적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앞으로 군복무 제도를 재편하게 됐을 때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지전달체계에 관해서는 사회복지사를 충분하진 않지만 늘렸습니다. 동사무소를 국민의정부 때부터 복지센터로 한다, 문화센터로 한다, 무슨 자치센터로 한다 하면서 부처 간 옥신각신 싸우는 것을 기어코 이제 끝장을 봤습니다. 이런 것이 간단한 것 같았는데, 이런 게 어렵다니까요. 한다고 보고받고 다음에 보면 그냥 있어요. 간다 간다 하는데 나중에 퇴근해서 보니까 그냥 있어요.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생활지원센터로 만들고 일반 공무원들에게 복지 교육을 시켜서 아주 전문적인 분야는 빼고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도록 전환시켜 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들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투자전략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략을 채택하고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복지 지출은 단순한 소비적 지출이라고 해서 계속 반대가 너무 많았고 경제 성장에 지장을 준다는 이론이 있어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복지 지출을 잘하면, 방법을 바꾸면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사회투자가 될 수 있다는 개념을 도입하고 우리 복지정책의 내용도 거기에 맞추어서 조정했습니다. 이것을 사회투자전략이라고 이름붙였습니다.

사회투자전략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입니다. 전략 내용을 보면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중시하고,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그리고 예방적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잘 교육시키면 생산성은 높아지고 사회적 부담은 줄어드는 것 아니겠

습니까?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자면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통합적으로 보고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계있는 유사한 것으로 사회정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어떤 사상과 전략으로 구체화되어 있는 것이 '비전 2030'입니다. 비전 2030을 참여정부의 경제 부처에서 만들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만들었거든요. 청와대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의 복지는 이제 경제 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동해 나간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민생과 관련된 것 중 아주 중요한 것은 균형발전정책입니다. 동반성장, 균형발전, 부동산정책, 주거복지, 대학입시 제도, 이 모두가 우리 국민들의 민생에 아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점에 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생과 복지는 국민의정부, 그리고 참여정부의 정체성입니다. 예산과 정책에서 그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구별됩니다. 그러나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의 복지투자를 가지고는 선진국이 되기에는 아직 까마득합니다. GDP 대비 한국의 공공·사회 지출 내지 복지 지출 비중은 미국과 일본의 2분의 1, 유럽에서 조금 앞선 나라의 3분의 1 수준에 아직 머물러 있습니다.

비전 2030은 참여정부의 가치와 전략입니다. 추상적인 선언이 아니고 매우 구체적인 재정 계획입니다. 민생과 복지정책은 이후 정부의 성격에 관해서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보수냐 진보냐,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감세냐 아니냐, 이런 것이 대통령 선거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나라당의 민생정책을 한번 대강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심성 정책은 짹짹 내놓는데, 재원 조달에 관해서는 아무런 방안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세를 주장해서 있는 재원마저 깎아 내리자고 합니다. 부동산과 주택정책을 끊임없이 흔들었습니다. 어느 후보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들먹여서 다시 부동산

산정책이 흔들리거나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법 통과할 때엔 찬성해 놓고, 할 때까지 계속 애먹이고, 하고 나면 탄소리 하고 그래요.

균형발전에 관해 얼마 전에 행정수도를 반대했던 사람이, 대통령 후보를 하겠다는 사람이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이 실패했다고 그렇게 어디서 말을 했습다. 이분은 균형발전 옆에 오면 안 되거든요. 행정수도 반대해서 반 토막 내놓은 사람 아닙니까? 이것마저 해야 되는데 이 양반이 이것 하겠어요?

그건 그렇고 균형발전정책은 아직 법 절차와 계획을 세우고 법 절차의 단계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논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제 삼을 딱 뜨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삼도 안 뜬 사업을 놓고 실패라고 먼저 깎아내리는 것은 무슨 심보일까요? 안 되면 좋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균형발전정책, 여러분 잘 지킵시다. 두 눈 딱 부릅뜨고 지킵시다.

대학 본고사 부활하자고 합니다. 대학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돈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자는 주장입니다. 공교육을 망치고 기회 균등의 가치를 흔드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 정부를 좌파 정부, 분배 정부, 작은 정부 해라, 국채가 어떻다, 감세, 계속 이런 주장하는데 결국 이 사람들 주장을 모아 보면 앞으로 그 사람들이 정권 잡으면 복지는 국물도 없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복지 하면 민주노동당이 있지요. 근데 그분들 지난번 선거 때 부유세 부과를 주장했는데 같은 세금을 내더라도 부유세 하면 내기 싫거든요. 기분이 나쁘거든요. 종합부동산세 내자 하니까 내지 않습니까? 절대로 국회에서 통과 안 될 것만 계속 주장하고, 생색만 내고, 성과는 하나도 없는 그런 정책을 계속 써요. 반 재벌, 반 시장주의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지만 복지나 사회투자라는 측면의 정책을 보면 쓸 만한 정책이 별로 없어요. 투쟁에는 강하지만 창조적인 정책에는 약한 것 같습니다. 사회정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제, 사회 두 가지 말씀드렸습디만, 대개 이쯤에서 종합해서 한 가지 덧붙이면 참여정부는 위기를 잘 관리하고 극복해 온 정부입니다. 『있는 그대로 대한민국』을 보시면 1998년, 2003년의 그래프는 급격한 하강 곡선을 그리고 골짜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1998년에 기업 부도가 났고, 2003년에는 가계 부도가 났습니다. 2003년의 위기가 1998년 위기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그래프는 잘 말해 줍니다. 1998년도에 나빠졌던 것이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많은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용불량자, 가계부채, 카드 남발 금융 위기, 중소기업 대출로 인한 금융 위기, 2003년도에는 정말 잠을 편히 잘 수 있는 날이 없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해서 다 넘겼고 민생 경제는 2004년부터 이제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회복은 복핵 위기라든지 유가 상승, 환율 상승, 이런 악조건을 안고 또 끊임없이 위기다, 파탄이다, 총체적 실패다, 온갖 저주와 악담을 이기고 극복한 것 아닙니까?

복지 지출의 증액 때문에 국채는 조금 늘었습니다. 몇 백조 원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른 용도입니다. 공적 자금 전환과 외평채, 그 채무는 우리가 물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무라도 괜찮은 채무입니다. 물건 사 가지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우리가 정부 지출, 일반 재정의 지출에 비해서 진 부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여하튼 그렇게 지금 건디어 왔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우리 국민들이 잘해 주십니다. 국민들의 역량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잘 극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요즘도 계속해서 실패다, 무능이다, 참여정부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 양반들이 1998년의 후유증이 아직까지 다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는 분들 있으면 우리 책 한 권씩 사서 선물 좀 하세요. 1998년에 나빠진 지표를 회복하는데 지금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집단입니다.

청와대에서 매일매일 언론한테 얻어맞고, 한나라당 한마디 하면 톱기사로 올라가서 또 얻어맞고, 맞다가 오늘 저 혼자 아무도 안 말리는 데서 일방적으로 한번 해 보니까 기분 좋습니다.

참여정부는 평화와 안정을 확실히 지키고 그리고 증진하고 있습니다. 북핵문제에 관해서 대화에 의한 해결 원칙을 그야말로 딱심 있게 관철해서 이제는 쌍방이 모두 확실하게 대화의 길로 들어가서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9·19선언은 그야말로 참여정부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9·19선언 안에 동북아시아의 다자안보협의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은 그야말로 참여정부가 6자회담, 북핵 이후의 동북아 질서를 미리 내다보고 당사국들을 설득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뭔가 좀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남북 간 신뢰가 많이 증진됐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내하고 양보하고 절제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 나쁜 소리 들으면 두 마디 쏘아 주고, 또 세 마디 돌려받고 네 마디 쏘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상호주의라고 합니다.

미사일 발사 했을 때, 핵 실험 했을 때 그 당시의 우리 언론, 정치, 국민들 저를 죽사발 만들었습니다. 여론조사해 보니까 '잘못했다'가 70% 이상 나왔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느냐, 한 대 때려야지.' '새벽에 왜 비상 안 걸었느냐.' 이런 것은 옛날에 안보독재 할 때 써먹던 겁니다. 걸핏하면 비상 거는 것, 안보독재 할 때 써먹던 것인데 그때 기억이 남아 있어 왜 안 하냐고 국회에서도 떠들고 통일부 장관이 별경계 뒹달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까지 섭섭하게 왜 그랬냐고 합니다. 우리가 절제하는 가운데 신뢰가 구축되는 것입니다. 저는 북한의 자세가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동북아 시대 구상, 균형외교, 전략적 유연성,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모두 적지

않은 성과입니다.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이 또한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의 정체성입니다. 한나라당은 친북 좌파정권, 퍼주기, 금강산·개성공단 중단하라, 그렇게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거기에 장단을 맞추어서 저를 성토했던 사람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절대로 이양받지 말라고 하면서 서울 한복판에서 시위하던 분들 지금 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웃고 말 수도 있는데, 우리 사회의 이 같은 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소위 한반도 시대, 동북아 시대, 다민족 시대를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가 과연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대목에서 그 말씀을 하나 드리지요.

2020년이 되면 전 세계 경제의 5분의 1이 동북아로 집중된다, 그래서 세계의 경제 중심이 된다, 그렇게 말하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경제의 중심이 된다고 해서 결코 동북아시아 또는 동아시아가 세계의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문명의 중심 요소를 단지 경제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문명의 핵심적인 요소는 공존의 지혜, 말하자면 평화와 공존 아니겠습니까? 평화와 공존의 전략과 정책이 앞서 있는 나라가, 앞서 있는 지역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계의 중심은 미국이 아니고 유럽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북아시아가 진정으로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고 세계 문명의 중심으로 발전하려면 우리의 국가적 전략과 국민의식을 새로운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참여정부는 안보를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국방 개혁을 이제 돌이킬 수 없도록 제도화해 놓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갑니다. 윤광웅 장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다 한다 하면서 안 했는데 윤 장관이 들어오셔서 다 만들어 놓고 나가셨습니다. 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국방비 투자 구조도 다 바꾸고, 군 구조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군의 전투력

개념도 바꾸고 그렇게 해서 국방력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는 정책이 국방개혁입니다. 20년 동안 말로만 해야 한다하면서 미루어 왔던 것인데 이번에 확실하게 본체도에 들어갔습니다. 국방조달체계, 군 사법제도, 군 의료서비스 이런 것들을 다 개혁해서 합리화, 효율화하고, 그래서 정예강군을 만들어 국방력을 증강한다. 이것이 국방개혁의 논리입니다.

하나하나가 모두 저항이 만만치 않은 문제들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도 뜻심과 전략을 갖고 했습니다. 우리 귀한 자식들 병영 생활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나라의 위신을 높이고 국익을 증진하는 외교를 했습니다. 균형외교를 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같은 일들, 미루어 왔던 숙제지요. 한·미동맹을 재조정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에는 이제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공원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돈은 좀 들지만 대운하 같은데다 돈 쓰지 말고 이런 데 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본시 그분이 훌륭하고 국제무대에서 신망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균형외교를 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 자리 안 시켜 줍니다. 하여튼 균형외교가 좀 기여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균형외교 안 하거든요. 대미 일변도 외교를 안 한다고 저에게 얼마나 타박을 쫓았습니까?

자원 확보도 꽤 많이 했답니다. 그림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략적인 해외투자 이런 것을 기획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알제리, 아제르바이잔, 나이지리아, 그 밖의 동남아 여러 국가에 한두 개의 사업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정부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패키지로 투자하고 협력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제는 한국도 본격적인 해외투자 국가가 될 것입니다.

요즘 경상수지 적자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외국에서 과실송금이

들어오는 게 없거든요. 그 대신 과실송금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앞으로 투자를 통해 과실송금 들어오는 나라로 갑니다. 참여정부에서 확실하게 그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파병 문제, 전략적 유연성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시비가 좀 있었고요, 한·미 FTA 문제, 이 부분은 타당성에 대해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질문을 받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다니면서, 외교하면서 제가 받은 느낌으로는 한국이 국제무대의 당당한 일원으로 등장한 때는 국민의정부부터입니다. 지도자의 정통성이 국가 위신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많이 실감했습니다.

어느 정부의 성과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약입니다. 공약은 그 시기 국민의 요구를 담아 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국민들의 수많은 요구 중에서 국민들의 공감대가 가장 높은 것이 핵심공약 아니겠습니까? 핵심공약은 보통 그 시대의 역사적 과제, 바로 시대정신을 응축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약은 중요합니다. 참여정부의 공약을 보겠습니다.

핵심공약만 보면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 ‘떳떳한 국민, 당당한 나라’ 이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제일 많이 썼던 것이 개혁과 통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정치, 이것이 국민들한테 가장 많이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 소리 말고 정치 개혁해라, 이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독재와 권위주의의 잔재를 청산하고 정치부터 똑똑히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후보들이 들고 나오는 공약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행 과정을 점검해 봅시다. 우선 개혁의 공약입니다. 저는 후보 시절에 『노무현이 만난 링컨』이라는 책의 서문에서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강한 정부’ 이런 공약을 했습니다. 그 뒤에 대통령 후보가 돼서는 ‘친구

같은 대통령’ 이렇게 공약했습니다. 정치권력을 개혁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권위주의, 가신정치, 측근정치 등도 개혁하겠다는 것이었지요.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 이것은 정치권력, 권력기관, 언론권력의 횡포를 염두에 두고 한 공약이었습니다. 정경유착, 권언유착, 부정부패, 연고주의를 다 청산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정보의 평등, 기회의 평등, 조세행정의 투명화, 공정위 강화, 검찰권의 공정성,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원칙과 신뢰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 합리적인 사회를 얘기했었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측이 가능한 사회로 가자,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떳떳하게 살 수 있다, 떳떳한 국민이 거기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사회, 복지는 그 자체가 가치이거니와 갈등 예방과 국민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균형발전사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 통합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가 영남에서 득표한 것이 32%였습니다. 이것은 그 이전의 두 배에 해당되는 아주 막대한 표입니다. 아무리 마음대로 쓰는 신문도 요즘 지역차별, 인사편중 이런 것은 안 씁니다. 없나 보죠. 그런데 다시 지역주의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려워지면 지역에 기대려고 하는 기회주의가 다시 대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새로운 정치, 그것은 대선 과정에서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선된 이후에 대선자금 수사로 우리나라에 정치문화의 천지개벽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요즘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천헌금과 같이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정상배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지역주의로 공천권이 이권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을 미리 보면 개혁의 공약이 없습니다. 정치개혁의 공약이 안

보입니다. 언론도 대강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8건이나 되는 공천헌금 사건을 수사했는데 보도는 별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이 보고까지 하도록 했는데 그래도 대충 보도하고 말아 버렸습니다. 공천헌금은 괜찮다, 자기들끼리 해먹으니까 국민은 손해 없다 이것인가요? 큰일났습니다. 정말 큰일났습니다.

그리고 과거사 정리를 공약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족쇄를 풀고 미래로 가기 위해서 과거사 정리를 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한 일입니다. 왜 과거에 집착하느냐고 비난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로 가기 위한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정부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는 국가 발전의 핵심 역량입니다. 일하는 태도와 방법을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조직과 제도, 절차를 모두 혁신합니다. 엄청난 시스템의 혁신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업무를 매뉴얼로 만들고 또 표준화해 가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의 품질관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행정제도의 기반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책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통계가 없어서 너무 불편했습니다. 다 정비하고 있습니다. 국가평가체계도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사전점검체계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하는 방법을 혁신했습니다. 혁신을 혁신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혁신 기법이 지금 공직사회에서 적용되고 있고 많은 성공사례가 나왔습니다. 책을 모으면 이 스크린 벽이 가득 찰 만큼 각 부처나 조직에서 사례들을 발표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쪽정이라도 좀 있습니다. 쪽정이라도 그게 어디입니까? 정부 혁신은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혁신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혁신지수 세계 7위, 참여정부 대통령은 혁신 대통령입니다.

참여정부 대통령은 설거지 대통령입니다. 20년, 30년 묵은 과제들을 다 해결했습니다. 행정수도는 30년 묵은 과제이고, 용산 미군기지 이전, 전시작전통제권, 국방개혁은 20년 묵은 과제이며, 방폐장 부지 선정, 장항공단은 18년 묵은 과제입니다. 사법개혁은 10년 이상 끌던 과제이고, 항만노무공급체계 개선은 100년이 넘는 과제인데 이것을 참여정부가 해결했습니다.

그냥 넘겨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전부 갈등이 있고 저항이 있었습니다. 새만금, 천성산터널, 사패산터널, 공공기관 이전, 화물연대, 노사관계 제도 선진화, 비정규직 입법, 특수고용 문제, 부동산 보유세, 국세 투명화, 성매매특별법, 언론개혁, 과거사 정리, 그러니까 나라가 시끄럽지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렵다고 회피하거나 결코 미루지 않았습니다. 소신과 뜻심, 그리고 치밀한 전략으로 정면 돌파하고 책임을 다했습니다. 묻혀 버리기 쉬운 일까지 찾아내서 처리를 한 것도 있습니다. 철도공사 적자 문제, 항공우주산업 재무구조 문제, 이런 것들도 다 챙겨 가면서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방송통신융합, 4대 보험 징수 통합, 자본시장 통합,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방송통신융합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언론의 힘이 너무 셉니다. 국민연금도 손해가 많습니다. 하루 800억 원씩 손해가 난다고 하고, 1년에 14조 원씩 적자가 누적된다고 합니다. 어렵습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연금을 받고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기구하고 사업적으로 투자하는 기구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게 참 어려웠습니다. 그 방안을 어렵게 마련해서 16대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공무원연금 투자운용체계를 개선하면 주식 투자를 해서 주가가 올라갈 경우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불리하다고 해서 뒤로 미뤄 버렸습니다.

적대적 언론 가운데에서, 여소야대 국회에서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해냈는지

정말 우리 장관들과 실국장들이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국회의원 타이르고, 달래고, 매달리고 그렇게 해 온 것입니다. 공무원들 칭찬을 자꾸 하는데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빔을 많이 졌으니까요.

기자실 논란이 지금 뜨겁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해가 있어서 개혁한 것입니다. 1차 개혁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옛날의 폐해가 되살아나는 것 같아서 2차 개혁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대로 넘겨주면 다음 정부에서는 기자실이 다시 부활되고, 사무실 무단 출입도 부활되고, 가판도 부활되고, 자전거일보가 다시 부활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확실하게 정리해서 넘겨주기 위해 제2차 브리핑제도 개선을 한 것입니다.

왜 유독 언론만이 부당한 권리와 부당한 이익을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까? 민주화 이후 모든 조직과 집단이 관행이란 이름으로 누리던 부당한 이익을 다 포기하고 있는데 왜 언론은 그렇게 못합니까? 국민의 알권리를 방패로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으면서 왜 부당한 이익을 주장합니까? 언론의 이기주의가 너무 지나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언론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왜 양심 없는 보도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 언론 선진국에는 다 기자실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기자실이 있는 일본은 언론 자유 53위이고, 미국은 51위이고, 참여정부의 언론 자유는 31위라는 사실은 왜 보도하지 않습니까? 세계언론인협회의 성명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누가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감스럽습니다. 걸핏하면 내놓는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문을 조작하기가 어려운지,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인지 묻고 싶습니다.

언론 자유, 언론 탄압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언론은 집단이기주의의 껍질을 버리고 정직하게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과연 언론 자유가 기자실에

있습니까? 유신 시절, 5공 시절은 기자실 전성시대였습니다. 그 기자실에 언론 자유가 있었습니까? 통제와 유착과 부당한 이익만 있었을 뿐 아닙니까? 정말 기자실에 국민의 알권리가 있습니까? 알권리는 기자실의 관급 정보 받아쓰기와 귀동냥으로 충족되는 게 아닙니다. 발로 뛰어서 기사를 써야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했다 싶은 좋은 기사들 중에서 기자실에서 나온 기사는 없습니다. 기자실에서는 좋은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출입처 기자실은 경쟁의 필요성을 줄이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출입처 제도는 편견과 유착의 근원이 되고 기사를 획일화하는 백해무익한 제도입니다. 좋은 기사, 나만의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출입처 바깥으로 나가서 발로 뛰고 시야를 넓히고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기사를 써야 합니다.

출입처를 없앤다고 언론 탄압이 되겠습니까? 1차 개혁 때도 언론을 탄압한다고 반발했지만 언론 자유도는 오히려 더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사의 품질도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가판도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온라인 브리핑과 온라인 질문답변 시스템을 이용하면 기자실보다 훨씬 편리하게 취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자수가 적은 언론, 경쟁력이 약한 언론에게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재는 게 편이라는 것도 어지간할 때 애교지, 무조건 초록은 동색이라고 하면 기자 다 함께 욱먹습니다.

대한민국 기자의 위신과 자존심을 그런 대로 유지하게 해 준 것은 유신 시절의 해직기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듯이 지금 이 시기에든 기자실 폐지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언론이 있어야 뒷날 우리나라의 언론인 전체가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언론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야 언론의 밥 아닙니까? 볼펜 들고, 카메라 들이대고 묻는데 어찌겠습니까? 그러나 국정홍보처 폐지, 기자실 부활을 대통령 공약으로 들고 나오는 사람

들은 너무 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추파라고 부를까요? 영합이라고 부를까요? 굴복입니까? 참 어이가 없고 한심합니다. 뭘 좀 알고 말합시다. 엉터리 기사만 따라 읽지 말고 다른 나라 사례들도 알아보고 공부도 좀 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미래, 우리나라의 미래도 생각하고 말합시다. 제가 지금 언론 탄압을 하면 무슨 영화를 얼마나 보겠습니까? 고작 서너 달입니다. 8월에 개혁하는데 9, 10, 11월 그때는 이미 무대가 정부를 떠나고 있는 때입니다. 저는 뒷방 아저씨 아닙니까? 언론 탄압 하고 말 것이 뭐가 있습니까? 뜻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론 탄압도 나쁜 일이지만 언론의 눈치를 보고 영합하는 것도 나쁜 일입니다. 언론에 영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진심입니까? 그렇게 하면 정권 잡습니까? 그렇게 정권을 잡아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은 여론과 언론의 눈치를 살피느라고 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정권, 언론권력에 영합해서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정권으로 치열한 국가 간의 경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수룩한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런 정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영합도 정도가 있습니다. 국정홍보처 폐지까지 들고 나오는 것은 정말 지나칩니다. 국정홍보처가 불법이라도 했습니까? 설사 불법을 했다 치더라도 국가기관을 폐지할 일은 아닙니다. 차떼기 하고 공천헌금 받은 정당도 문을 닫지는 않았습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국가기관을 폐지하자고 하는 사람들 보면 참 무책임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만 신문 제목이 험악하겠지요?

민생은 정책에서 나오고 정책은 정치에서 나옵니다. 정치는 여론을 따르고 여론은 언론이 주도합니다. 언론의 수준이 그 사회의 수준을 좌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언론이 먼저 선진언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선진국 한번 해 봅시다. 정치와 언론만 선진국 수준에 미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와 언론이 각성해서 우리도 선진국 한번 해 봅시다. 갑시다. 부탁드립니다. 최소한 있는 정책과 사실만은 제대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정부가

KTV와 국정브리핑에 그렇게 매달리겠습니까? 내용을 알고 정확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정부가 보도점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기사를 일일이 점검까지 하겠습니까?

이제 모두 양심과 용기를 가지고 개혁에 동참합시다. 먼 후일 참여정부에서 가장 보람 있는 정책이 무엇이나고 물으면 나는 언론정책, 언론대응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역부족이고 한계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매우 중요한 일이고 상당한 진보를 거둘 것입니다. 민주주의 진보에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참여정부에 대한 제 총평을 하겠습니다. 참여정부는 험한 바다를 헤쳐 왔습니다. 거센 바람과 험한 파도 그리고 뜻밖의 암초를 수없이 만났습니다. 끊임없는 진로 방해와 발목잡기, 흔들기, 돌발사고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침몰하지 않았고 좌초하지도 않았습니다. 말년까지 레임덕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당시에 노사모 사람들이 돈 없이 선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덕분입니다. 그분들이 저를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대선자금 수사도 할 수 있었고, 그 많은 의혹 제기에도 무너지지 않고 견뎌 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정부가 하고자 한 일은 대체로 다 실천이 되었습니다. 참여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안은 끊임없이 시끄러웠지만 한국호는 잘 가고 있습니다. 방향도 괜찮고 속도도 괜찮습니다. 흔들지 않은 정책이 없었는데도, 그렇게 발목을 잡았는데도, 여소야대 국회인데도 이렇게 된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이거는 정치학자들이 한번 연구해 볼 가치가 있는 현상 아닐까요?

종합적으로 봐서 5년 전 대통령 선거 때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제게 기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대 수준에 비교해 보면 한참 낮지요? 저는 기대 수준을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시끄러운 것은 그 이후에 새로

운 불만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공약한 것은 다 호주머니에 받아 넣고 ‘경제 내
봐라, 이 사람아.’ 합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준비 안 된 대통령,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지나고 보니까 그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에게 ‘이제는 그 말씀 취소해 주십
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준비되지 않은 것 한 가지가 있는 것 같
습니다.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는 말을 고상하게 잘 다듬어서 해야 되는데 그 재
주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고 지금도 아직 그 재주가 부족합니다. 앞으로 한 번 더
시켜 주면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몰랐습니다. 하도 시샘이 많고 시비가 많아서 노사모 있는 데는
잘 가지도 못하고 보고 싶어도 못 보고 그랬습니다.

고향 생가 바로 뒤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제 집은 ‘지붕이 낮은 큰 집’입니다.
왜 큰 집이냐면 규모가 작지 않으니까요. 선입견을 어떻게 갖고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큰 집이라고 이름을 붙여 봐야 실제로 보고는 ‘별로 크지도 않
은 데 뭘 큰 집이야’ 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리고 지붕이 아주 높고 이러면 권위적
으로 보일 것 같아서 지붕을 낮게 짓고 있습니다.

그 앞에 조그마한 마당 하나 만들고 해서 이제 ‘노사모 마당’으로 이름을 붙일
생각이거든요. 노사모라고 이름을 붙이니까 그러면 노사모 참여 안 했던 사람은
어찌라는 얘기냐. 저는 노사모라는 것을 고유명사로도 쓸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회참여 활동, 정치참여 활동을 보편적으로 그냥 노사모 활동이라고 보통명사
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참여포럼 하면 노사모도 다 들어가는 것이고요. 나중에는 참여포럼도 노
사모로 이렇게 서로 통합되는 과정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보편적
현상이니까요. 그러나 제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도 함께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여정부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직접 노사모 활동에 참여

는 안 하셨지만 관료생활 하다가, 학자 하다가 정부에 참여하신 분 많지만, 그분들이 노사모라는 현상을 눈으로 지켜봤고 보통 1년 이상씩 저와 함께 일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추구하느냐에 대해 공감대가 상당히 높이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공무원은 보통 공무원과는 다릅니다. 참여정부 정무직에 장·차관 지낸 분들은 그 이전의 관료 출신과는 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는 아니겠지만, 대체로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참여정부의 대통령 생활을 하는 동안에 굉장히 소중한 인적 자원을, 한국사회에 새로운 흐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훌륭한 인적 자원을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누구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양성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도 지금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이런 사회에서 뭔가 변화를 추동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잘 가고 있는가, 저는 멀리 보아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보아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찰력과 전략적 안목을 가지고 보아야 한국이 잘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적어도 참여정부의 전략은 그동안 적절했는가, 적절했다면 큰 위기 요인이나 부담 요인을 다음 정부에게 넘기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당분간 잘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계속 잘 가려고 하면 다음 정부도 좋은 정부라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결론은 잘 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국가발전전략은 21세기형 국가전략의 모범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사람들이 경제를 중심으로 항상 사고하기 때문에 저도 국가발전전략을 경제라는 목표를 중심에 두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은 시장을 넓히는 전략,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전

략, 지속가능한 기업환경을 만드는 전략, 그리고 시장친화적인 사회, 크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시장이 넓어야 기업들이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장을 그저 공간적 넓이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시장을 질적으로, 부가가치라는 측면에서 인식한다고 하면 똑같은 시장에서도 시장은 얼마든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이 높으면 시장이 넓어집니다. 그런데 기술이 높으면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따라서 높은 경쟁력과 넓은 시장은 높은 기술과 넓은 시장,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과학기술 혁신, 미래 성장동력 육성, 혁신 주도형 기업 지원 정책, 정부 혁신, 교육 혁신은 크게 보아서 다 혁신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반성장과 상생경영도 역시 시장을 넓히는 전략입니다.

기업과 기업 간의 경쟁도 중요하지만, 기업 생태계와 기업 생태계 사이의 경쟁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도요타의 사례를 많이 드는데 도요타는 협력업체와의 기업 생태계를 아주 경쟁력 있게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업 생태계 간의 경쟁 시대를 생각하면 동반성장과 상생경영도 전략입니다. 동반이라는 개념을 보면 기업과 기업, 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기업과 지역사회, 이 모두가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전략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방은 시장을 넓히는 전략입니다. FTA와 적극적인 해외투자, 이런 것인데 개방도 이제는 단순히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역사를 돌이켜 보면 교류하지 않은 문명은 전부 쇠약하고 소멸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역사, 소위 물질적 측면의 세계 역사는 통상국가가 주도해 왔습니다. 물질문명을 주도하는 국가가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지배받지 않으려면 지배력에 대항하려면 적어도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통상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선진적 통상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방하고, FTA도 하고 WTO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인식의 오해가 있습니다. 자꾸 쇠고기를 FTA의 결과로 얘기하는데, 쇠고기는 FTA를 안 하더라도 수입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계 수십 개 국가가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있는데, 미국 시장이 한국에 대단히 중요한 수출시장인데 우리가 미국 쇠고기를 안 먹겠다고 하면 우리 상품 미국에 팔아먹기 쉽지 않죠? 미국은 막강한 반덤핑, 수입규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시장을 지배할 만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장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합당한 명분 없이 어떻게 쇠고기 수입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에 있어서는 한국이 지킬 것은 다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든 FTA의 결과는 아닙니다. 지난번 선결 조건에 쇠고기 문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어차피 줄 것을 주는 것입니다. 생색낸 것에 불과하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대통령은 아닙니다. 압력이라는 용어를 자꾸 쓰고 있는데, 이견 국가 상호 간의 통상 관계에서 여러 가지 요구조건들을 내걸고 주장을 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인데, 왜 하필 미국 얘기만 나오면 압력이나 콤플렉스라고 합니까? 미국 콤플렉스를 뒤집으면 일종의 사대주의적 사고입니다.

제가 대통령 후보였을 때 거의 모든 사람이 자꾸만 저더러 미국 갔다 오라고 그래요. 미국 가서 미국 사람한테 눈도장을 찍고 오지 않으면 한국에서 대통령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해 보자. 진보 진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와 같은 미국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벗어 던져야 됩니다. 반미라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도 않거니와 그것은 열등감의 표현이고, 그것을 거꾸로 뒤집으면 사대주의의 표현이기 때문에 벗어던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은 적극적 해외전략을 채택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정부에다 지시해서 기업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 보면 한국이 엄청나게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팔아먹을 것도 많습니다. 실력이 대단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투자의 안정성도 전부 검증하고, 투자 자본을 결집하는 것도 함께 합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도 해외에서 열심히 투자하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 동반성장하고 상생하는 그런 모범적인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GDP보다 GNI 성장률이 낮다는 것도 극복하게 되겠지요? 그렇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꾸 환율이 올라가는 것을 막는 데도 우리의 적극적인 해외투자가 꼭 필요한 전략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기업 생태계를 잘 조성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투자와 금융·상품·노동, 이런 것을 잘 결합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필요합니다. 기업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로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관치경제를 버리고 시장경제로 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규제는 적을수록 좋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자유시장을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 자유를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자유로 생각하지 않고 일부 시장지배적인 강자의 자유로 인식하고, 시장에서 강자가 어떤 일을 하든 간섭하지 말라, 이렇게 주장하는 자유시장주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야만 자유시장의 이점, 경쟁과 향상이라고 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시장에서는 착취가 발생할 뿐이지요. 이것은 미국에서 1900년경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극보수주의이면서도 카르텔을 전부 해체하는 결단을 내린 것을 보더라도 명백한 것입니다.

모든 규제가 악은 아닙니다. 필요한 규제는 해야 합니다. 필요하고 공정한 경쟁을 형성하기 위한 규제도 있습니다. 환경, 노동, 인권이라고 하는 소중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제는 합리적이어야 하고 통과하는 데 시간을 줄여주고 비용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동안의 규제를 건수로 계속 계산했는데 하루밖에 안 걸리는 그런 규제는 아무리 수만 건이 있어도 지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건수의 문제가 아니고 규제의 통과 시간을 줄여주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업이 구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행위에 걸리는 일련의 덩어리 규제들을 전부 개혁해 나가려고 참여정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제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특허심사기간이 22개월에서 10개월로 줄었습니다. 화물 통관에 드는 시간이 참여정부 초기 9.6시간에서 2005년에 5.6시간으로 줄고 지금은 3.6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정책도 하나의 정책을 입안하고 토론을 거쳐서 성원하고 법을 통과시키는 데 들어가는 시간을 전부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 들어 국회에서 통과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런 소상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그렇게 큰 소리만 뽕뽕 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대단히 치밀하다는 것을 여러분께 자랑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를 과장급 대통령일 때도 있고, 그러면서도 세계적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한 기업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의 기업환경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환경이 중요한 것이지요. 노사 간 신뢰의 문화가 있어야 되고 동반성장

과 상생의 경영, 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균형발전, 우리 사회가 세대·계층·지역·노사 간 균형 있는 발전을 하게 됐을 때 갈등이 예방되고 국민의 역량이 통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통합의 수단으로서도 균형발전은 필요하고 균형발전 자체가 가치이자 중요한 성장 전략입니다.

사회투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투자는 우리 국민을 경쟁력 있는 국민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적 자본 투자, 기회 균등, 예방적 투자, 경제·사회 정책의 통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어 가는 국가전략입니다. 사람이 경쟁력이므로 경쟁력 있는 국민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경쟁력 있는 국민이냐? 건강하고 심적으로 희망이 넘치고 안정된 국민입니다. 오늘의 불안이 없고, 기회가 열려 있어서 내일에 대한 불안이 없는 사회에서 희망을 가지고 의욕이 넘치는 국민, 잘 교육받은 역량 있는 국민, 그것이 경쟁력 있는 국민이지요.

경쟁력을 저해하는 국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낙오하는 국민들이 있을 수 있고, 낙오하는 국민들이 많을수록 우리 사회에 또한 부담이 되는 것이지요. 인도적으로도 옳지 않거니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방적 투자를 하자는 것입니다. 어릴 때 많이 투자하고 불편하고 조건이 불리한 사람들에게 집중 투자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사람다운 삶을 보장함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부담을 없애 가는 것이 예방적 투자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시장친화적인 사회, 계속 시장, 시장하니까 좀 웃기는 얘기 같지요. 요즘은 시장의 시대이니까요. 민주주의가 바로 시장친화적인 사회입니다. 민주주의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유는 창의를 자극하는 제도입니다. 민주주의는 경쟁의 정치이고 공정한 경쟁을 이상으로 하는 정치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은 민주주의와 딱 맞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냥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용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그런 민주주의를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사회적 자본이론이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뭐냐 했을 때 원칙이 통하는 사회, 신뢰가 있는 사회, 투명하고 예측 가능성이 있는 사회, 사회 통합성이 높은 사회, 대개 그런 것이지요. 이런 것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자본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잘 축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그저 인권 보장, 국민주권 사상을 실현하는 제도로만 보지 말고, 우리 경제가 성공하기 위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민주주의 발전을 거부하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주의가 잘 실현되고 평화가 정착되고 그래서 국민과 사회가 안정된 사회가 시장친화적인 사회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참여정부 국가발전전략입니다.

참여정부는 비전 2030이라는 국가발전전략을 장기 재정계획으로 만들어 놓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략 목표는 혁신적이고 활력 있는 경제, 안전하고 기회가 보장된 사회, 안정되고 품격 있는 국가입니다. 혁신, 활력, 안전, 기회, 쾌적한 환경, 품격 있는 문화 이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핵심 전략에 있습니다. 제도 혁신, 선제적 투자, 이 개념은 기획예산처에서 만들어서 저한테 상납한 것입니다. 경제부처가 이런 전략을 기획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국가발전전략을 여러 개 분산시켜 논리적 구조로 말씀드렸습시다만, 비전 2030에서는 5가지 전략으로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성장동력을 확충하자, 사회복지를 선진화하자, 인적 자원을 고도화하자,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자, 능동적으로 세계화하자. 그 안에 50개의 개별 과제가 있고 이것은 현재 진행 중이고 하나하나 진도를 점검하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점검하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왜 제가 막판에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요즘 청와대에는 초년도보다 힘들다고 불평이 있습니다. 왜 막판에 이렇게 하나. 저희가 주택정책을 만들어서 국민주택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만히 거슬러 올라가 연혁을 보니까 2002년 5월에 입안 해서 2003년에 2월에 국회를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 없이 바로 정책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주택 연간 10만 호라고 참여 정부가 떠들었지만, 사실은 국민의정부가 만들어 준 것입니다. 국민의정부도 좋은 정부예요.

국가발전전략의 전환은 국민의정부에서 시작됐습니다. 변화의 요구는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됐습니다. 세계가 변화하고 있고 한국은 개발독재의 잔재인 관치경제, 불균형 성장전략으로 인한 후유증, 요소투입형 경제에 발목이 잡혀 있었습니다. 대마불사의 신화, 과잉 투자, 권위주의, 독재의 잔재, 특권과 반칙, 정경유착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한국경제가 변화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위기를 이기지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의정부는 기업·금융·노사·공공 부문, 이렇게 4대 부문 개혁을 단행했고 혁신 주도형 지식기반 경제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에 혁신 주도형 경제라는 비슷한 이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관치금융이 완전히 청산됐고 자유와 인권이 신장되고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등 많은 진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정부에서 복지정책의 토대가 구축됐습니다. 생산적 복지의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바로 국민의정부가 진보의 정책을 채택한 것이고, 시장경제를 강조함으로써 시장경제와 진보정책의 조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평화주의 전략, 포용정책을 통해 안정과 활력을 조화시켰지요. 그래서 라면 사재기, 방독면

사재기와 같은 얘기는 국민의정부 이래 지금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국민의정부의 정책을 다시 한번 평가해 보면서 과연 지도자의 자리는 머리를 빌려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 같다, 해박한 지식, 지식과 정보에 대한 탐욕, 깊이 있는 사고력, 잘 정리된 가치와 철학이 꼭 필요한 자리인 것 같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정부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정부이고, 자주성을 가지고 있는 정부입니다.

분열주의를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정권입니다. 저는 1988년 분열된 민주세력에 참여한 이래 20년간 줄기차게, 일관되게 지역주의와 싸우고 있습니다. 국민통합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지역주의를 해소하는 것은 역사의 과제이자 참여정부에 부여된 역사의 소명입니다.

참여정부는 진보를 지향하는 정부입니다. 참여정부는 역시 평화를 지향하는 정부입니다. 국민의정부하고 똑같습니다. 좀 다른 게 있어야 하는데 통합주의를 하나 합시다.

지금도 사인을 해 달라고 하면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문구를 씁니다. 계속 애용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참여정부의 핵심 사상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는 사회, 이것은 자유와 평등, 인권과 민주주의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람 노릇하고 사는 사회입니다. 도리를 다하는 인간, 주권을 행사하는 국민, 이것이 저는 사람 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니 까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그러면 지금은 대한민국이 사람 사는 세상 아니요?'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제가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지금도 우리 집에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고 매일 훈수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시장경제를 강조하지만 그러나 시장만능주의, 경제제일주의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자

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은 사람을 위한 시장이어야 하고 경쟁은 사람을 위한 경쟁이어야 합니다.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근본적인 지향점을 저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보수가 무엇이며 진보는 무엇인가. 보수는 강자의 사상, 기득권의 사상입니다. 각자의 삶은 각자의 노력의 결과이므로 강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강자의 자유를 보장하여 강자가 주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모두 좋아진다는 생각이 보수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경쟁시장을 넓히기 위하여 개방을 하자고 하면서 약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나 지원에는 반대합니다. 힘에 의한 질서를 강조하며 갈등은 힘으로 제압하고자 합니다.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며 대외적으로는 대결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냉전적 정책을 좋아하는 것이지요.

진보란 무엇인가. 힘 있는 사람이 누리는 권력을 약자도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해 힘 없는 사람의 연대와 참여를 중시하는 생각입니다. 시장경제를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나 시장의 한계와 실패를 주목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요구합니다. 개방을 반대하고 대외정책은 평화주의를 지향합니다. 보통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수는 연대하지 않는가, 연대합니다. 은밀히 유착하지요.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의 진보는 민주노동당의 진보와 어떻게 다른가. 실현 가능한 대안이 있는 정부입니다. 현실에서 채택이 가능한 대안, 그리고 타협이 가능한 수준으로 정책을 만들고 현실에 적용할 대안을 만듭니다. 법으로 고용을 만들 수 있습니까? 법으로 정규직을 만들 수 있습니까? 만사를 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맞는 정책이라야 그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 돌아가는 이치에 맞도록 진보적 정책을 쓰자, 이것이 민주노동당과 다른 것이지요.

재원 조달이 가능한 정책이라야 합니다. 예산의 구조조정도 한계가 있고, 세금

을 함부로 만들고 올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적용 가능한 진보, 그러니까 실용적 진보입니다. 시장친화적인 진보입니다. 시장주의의 본질에 반하는 정책은 실현되기도 어렵고 억지로 실현하려고 해도 오래가지 못하고 왜곡이 발생해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시장친화적인 정책, 그리고 시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을 제공합니다.

개방 지향의 진보입니다. 개방의 문제를 이념의 문제로 볼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능동적 개방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이 기존의 진보와 좀 다릅니다.

배타하지 않는 자주입니다. 반미, 이것 또한 사대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을 배타적으로 배척할 이유는 없습니다. 바로잡을 것만 냉정하게 바로잡아가면서, 또 바로잡고 고칠 것은 고치되 한꺼번에 마음 상하게 해서는 좋은 일도 없고 또한 다 성취할 수도 없습니다. 힘도 없으면서 오기만 가지고 다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자주의 노선이 필요합니다. 대화하는 진보, 타협하는 진보입니다. 대화와 타협은 민주주의의 요체입니다.

비타협 노선은 근본주의, 절대주의에 근거한 투쟁전략입니다. 절대주의 비타협 노선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상대주의와 관용의 원리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타협 노선이 가끔 승리에 집착해서 책략에 매몰되거나 극단적인 전향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한나라당에 그런 사람이 꽤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열린우리당의, 참여정부의 진보를 합리적 진보 또는 실용적 진보, 유연한 진보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어느 것 하나를 적절하게 채택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맞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써 보면서 채택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어느 때 결정해서 계속 반복해서 쓰면 그것이 국민들에게 정착될 수도 있습니다. 합리적 진보가 가장 포괄적인 용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도와 실용은 뭐가 다른가. 중도라는 개념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

보와 보수의 중간에서 어정쩡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정책과 보수 정책을 실용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것이 합리적 진보이기 때문에 중도라는 개념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진보지만 극단적이지 않다는 뜻으로 중도 진보라는 말이 있는데, 그냥 중도라고 말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전적인 진보의 노선이 오늘날 사회투자 이론 등으로 발전했다고 해도 이는 여전히 진보일 뿐 중도의 길 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용적 진보, 합리적 진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논리적 설명을 위해서 부득이 쓸 수밖에 없는 가정으로, 만일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민주주의의 일반 원리로 보면 정부는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민주주의가 점차 발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끔찍해요. 한나라당이 무슨 일을 할까, 이것을 예측하자면 한나라당의 전략을 보아야 되는데 한나라당의 전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는 일은 거의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과 행동, 말과 행동이 다른 주장이 너무 많아서 종잡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참여정부의 정책 중에 한나라당이 반대하거나 흔들지 않는 정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반대한 정책도 거의 없습니다. 정부정책이 나오면 온갖 이유를 들고 나와서 반대하고 흔들고 하다가 막상 정책을 심의하고 표결할 때는 슬그머니 물러서서 찬성표를 던집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흔들기 위한 반대를 한 것이지요. 그 결과 대부분의 정책들은 참여정부의 정책대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게 만들어서 정책의 효과만 죽여 버린 것이지요. 참으로 무책임의 모범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요즘 그 당 후보들의 공약을 보아도 창조적인 전략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부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연하게 경제를 살리겠다,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략이 없는 공허한 공약입니다. 공약이라 할 것도 없는 미사여구입니다.

대운하, 열차 페리 등의 사업들을 두고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두 사업의 사업비를 다 보태 보아도 참여정부 균형발전 투자의 5분의 1도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균형발전 투자는 정부청사 건설비와 일부 기관시설 외에는 다 회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 부담은 11조 원 정도에 그칩니다. 대운하 건설비는 단기간에 회수되지 않는 투자입니다. 민자 유치를 한다고 하나, 참여할 기업이 있을 리 없으니 하나마나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열차 페리는 제가 2000년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에 타당성 없다는 결론을 이미 내린 사업입니다. 한다고 해도 참여정부의 물류 허브 전략에 비하면 너무 작은 사업입니다.

과학도시를 한하는데 그것은 참여정부가 법까지 다 만들어 놔습니다. 추가할 것이 있으면 도시 하나 지정만 하면 되는데 그걸 또 들고 나와서 혼듭니까? 이 정도 사업을 국가적 전략사업으로 내놓은 것이라면 좀 초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경제정책의 기본 원칙과 방향에 관한 전략적 공약이 나와야 할 시기이지 한두 건 개별사업 꺼내 놓고 옥신각신, 왈가왈부 할 때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는 경제정책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적인 국가발전전략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기 한국이 추구할 가치와 역사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전략적인 공약, 공약다운 공약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전략은 없어도 보수의 정체성은 뚜렷합니다. 그동안 말과 행동, 정책은 왔다갔다 일관성이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보수와 수구의 정체성입니다. 요즘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보수의 정체성이 좀더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강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에는 일관되

게 반대해 왔습니다. 복지와 사회투자는 분배정책, 좌파정책으로 일관되게 비난해 왔고 오히려 감세를 공약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감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른 계산해 봤는데 법인세 세수가 연간 6조 8천억 원이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금 어디서 거둘 것입니까? 이만큼 세출을 줄일 것입니까? 빚을 낼 것입니까? 저하고 토론 한번 해야 되는데 이게 자리가 있어야 물어보지요. 저는 그만큼 복지 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4%의 기업은 이 정책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나머지 중에서 일부는 조금 도움이 될 듯 말 듯하고 이익을 많이 내는 엄청난게 큰 기업들만 왕창 이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미국에서 부시 대통령이 상속세 폐지하겠다고 하니까 미국의 엄청난 부자가 참 혐오스럽다, 이렇게 말했다지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부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세금까지 자꾸 건드려요. 1991년에 1억 8천만 원 주고 강남에 아파트를 사서 그것을 11억 원에 팔아 9억여 원을 남긴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얼마 나오니까? 6,800만 원입니다. 9억 2천만 원 남긴 사람이 양도소득세 6,800만 원 낸다고 두려워서 '나 집 못 팔겠다.'고 합니다. 안 팔면 되는 거죠. 그거 팔 수 있도록 꼭 국가가 무슨 배려를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세율 7.5%인데 그걸 해 줘야 됩니까? 참, 정책이라는 게 어렵지요. 어려우니까 자꾸 속인단 말이지요.

균형발전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유시장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공정한 경쟁과 투명성을 위한 개혁에는 반대하고, 출자총액 제한제도·집단소송 반대하고, 사학법 개정도 반대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요하거든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했기 때문에 사후 감시를 철저히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확실한 권한을 주어 감시를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반대합니다. 지금도 한시적으로 조금 늘려 놨습니다. 금융정보요구권인가 해서 조금 늘려 놨는데, 확실하게 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참여정부는 공정위에 확실

하게 하라고 인력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소비자보호원도 그 쪽에 붙여 주고 인력을 상당히 많이 늘려 줬습니다. 연구소도 만들게 했는데, 참여정부 와서 공무원 숫자만 늘린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일이 늘어나는데 그럼 공무원 숫자 안 늘어나면 누가 공정위 합니까? 할 일은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회사가 커지면 사원이 많아지는 겁니다.

대신 이후 공무원 남는 곳에 공무원들 빈둥거리지 못하게 확실하게 조직 진단하는 수준 있는 연구와 비법 개발을 행정자치부에 지시해 놓고 있어서 앞으로 그런 것은 하게 될 것입니다. 필요한 구조조정은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고 교육훈련과 배치전환, 이런 것으로 갑니다.

서울시장이 공무원 퇴출 얘기하니까 그게 아주 좋은 정책인 것처럼 했는데, 그것 보면서 제가 바로 정부는 하지 말라고 메모를 보냈습니다. 반드시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해야 하고 확실하게 객관적 사실을 조사하고,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징계를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기는 해야 되지만 방법이 그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는 새로운 방법으로 완전히 인권도 보장하고 공무원의 권리도 보장하면서도 불성실한 사람을 퇴출할 수 있는 제도를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민주주의에 대한 비전은 무엇인지 제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보안법, 사학법 등의 개정과 공수처의 설치, 과거사 정리 등을 반대하는 것 보면 어쩐지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 같아 보입니다.

참여정부더러 무능하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만 그 말이 나오기 이전에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를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세력 무능론 했습니다. 지금 참여정부 무능론이라는 것은 민주세력을 싸잡아서 비하하기 위한 전술이지요, 책략입니다. 그러면서 무능보다는 부패가 낫다고 말합니다. 이런 망발이 어

디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한나라당은 우리 민주주의가 너무 많이 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확실합니다. 정치를 개혁하겠다는 공약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 정치에 개혁할 일이 없습니까? 참여정부가 다 해결해 버려서 너무 많이 와 버려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공천헌금 예방을 위한 정책은 한나라당이 내놔야지요. 자기들이 저질렀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지역주의가 강화될 것입니다. 공천헌금은 지역주의의 결과 아닙니까? 지역주의가 공천을 이권화해 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주의가 강화되고 부패정치, 낡은 정치가 되살아날 것입니다. 부패정치, 낡은 정치를 하는 정부는 볼 것 없이 무능한 정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과 한통속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노 정권이 언론과 싸움을 벌여서 친노 세력을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이것은 며칠 전에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 그대로입니다.

반대로 한나라당이 한마디 하면 그대로 신문 제목이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물론 일부 언론의 일입니다. 후보들이 화끈하게 언론의 역성을 들고 나왔습니다. 참으로 시대에 역행하는 공약을 이처럼 화끈하게 할 수 있을까,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했던가요? 정말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우리 언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눈을 감지 않아도 눈에 선합니다.

기자실이 살아나고, 돈봉투가 살아나고, 청탁이 살아나고, 띄워 주기, 덮어 주기, 권언유착이 되살아나고, 가판이 되살아나고, 공직사회는 다시 언론의 밥이 되고, 공무원의 접대 업무도 되살아나고, 자전거일보, 비데일보가 되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언론 자유가 신장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는 것입니까? 권언유착이 부활하면 민주주의는 후퇴합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국민이 됩니다.

한나라당이 개헌을 반대했습니다. 말을 뒤집은 것이지요. 논의조차 거부하다가 마지못해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후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론으로 약속한 것을 깎아뭇개겠다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언론들은 모른 척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언론도 개헌문제를 덮어 버리는 데 공모했으니까 새삼 들고 나오기가 민망스럽겠지요. 지켜볼 일입니다.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개헌을 해 놓고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다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데, 우선 대통령 되는 데 급급해서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의 일은 생각할 겨를이 없는 모양입니다.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때 그렇게 하지 않았 습니다.

아무런 역사의식도 비전과 전략도 보이지 않습니다. 집권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당과 후보가 이 모양이니 그 사람들이 집권하면 나랏일도 걱정이고, 힘 없는 사람들의 일은 더욱 걱정입니다.

이제 민주세력의 당면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당면한 일은 대통령 선거입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도입니다. 일 대 일의 구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당은 합치지 않고 후보만 단일화하는 방법과 당을 하나로 합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가는 마찬가지로입니다. 가능성이 높은 방안, 후유증이 없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지요.

과거의 경험을 보면 선거 때가 되면 당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같은 이유로 당을 합치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역사에 그런 일이 있는지는 미처 조사해 보지 못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1997년과 2002년에는 당을 합치지 않고 그냥 단일화해서 선거에 승리했습니다. 후보를 단일화하기 위해서는 대세를 만들고 쏠림을 만들어야 합니다. 쏠림은 국민들이 만들어 줍니다. 쏠림이 생기지 않으면 이제 그때 후보가 결단을

내리는 것이지요. 2002년에는 제가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열린우리당 일부가 당 해체를 주장하고 탈당해서 세력을 갈라 놓았으니 쓸림을 만들기가 참 어렵게 됐습니다.

앞으로 통합이 되고 호각을 이루는 양당의 후보가 각기 올라타는 일이 있다면 통합을 만들기도 어렵게 될 것이고 쓸림을 만들기도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당 해체를 주장해 온 사람들, 그리고 탈당한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오로지 대통합에 매달려서 탈당으로 대세를 몰아가려는 사람들의 전략은 소위 외통수 전략입니다.

그런데 그다지 확률이 높지 않은 어려운 일을 외통수 전략으로 채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외통수 전략은 실패할 경우에 다른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의 통합이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얘기입니다. 더욱이 대선을 앞두고 후보가 되려는 사람의 복잡한 계산이 개입될 경우에 당의 통합은 더욱 어렵습니다. 이런 사실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이런 어려운 일을 외통수 전략으로 채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외통수 전략을 채택하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험이 없는 탓이 아닌가 싶습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그렇다고 제가 대통합을 반대한다고는 듣지 마십시오. 그리고 쓰지도 마십시오. 다음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옆질러진 물입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외통수만 믿고 시간을 다 허비해 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합과 후보 단일화를 병행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대통합을 위하여 노력은 하되, 빠른 시일 안에 통합이 되지 않으면 후보를 내세워서 대세 경쟁을 하면서 대통합과 후보 단일화를 계속 추진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이런 일을 하는 데는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후보가 되기 위해서 당을 깨자고 하거나 탈당을 하는 것은 반칙입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정치를 망치는 일입니다. 국민들이 보면 실격 처리가 될 만한 사례입니다. 마음을

비우라고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최소한 원칙은 지키라고 충고하고 싶습니다.

통합과 후보 단일화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정책은 공부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는 정책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고 정책 대결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정책 대결을 할 만한 중요한 쟁점이 점차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대통령과 각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한나라당과 각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통합에 찬성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후보 단일화가 아니고 당이 대통합이 되었는데 혹시 그 당이 지역당 모습을 띠게 될 경우, 이후 총선이 다가오면 다시 영남과 호남에는 경쟁이 없는 안방 정치, 싹쓸이 정치가 될 것이고, 수도권 또한 지역을 내세우고 표를 모으는 전략으로 지역주의 정치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시 당을 통합하는 것은 총선에 적합한 전략인데, 왜 대선에서 합당 전략이 대세를 이루게 되었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지역을 내세워 표를 모으고 싶은 충동은 우리 정치를 영원히 후진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족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통합이 되더라도 지역당이 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그 이후의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이니 총선 때 걱정합시다.

여러분을 친노 세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악의적인 호칭입니다. 교묘한 상징 조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보 정치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묘하게 여러분을 계보 정치에 결합시켜 나가려는 것이지요. 계보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참평포럼입니다. 대선 조직이 아니라 참여정부에 대한 부당

한 중상모략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이 언론과 야당의 부당한 공세에 제대로 대응해 주기라도 한다면 굳이 왜 이런 조직을 또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여권 안에도 차별화를 전략으로 삼고 화살을 거꾸로 겨누는 사람들이 있으니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지 않을 수 없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언론은 공식적인 명칭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지적해 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범여권이라는 용어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정부와 연대하거나 공조라도 해야 여권 또는 범여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나라당과 공조도 하고 참여정부를 흔들고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어찌서 범여권이라고 부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를 이름이 마땅치 않아서 그렇게 붙였다면 제가 이름을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반 한나라 세력, 반 한나라 진영' 하면 될 것이지요. 이것이 맞지 않습니까? 앞으로 연대가 형성되면 반 한나라 연대로 부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백보를 양보해서 다른 사람들은 과거의 인연이라도 있지만 손학규 씨가 왜 여권입니까? 이것은 정부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이번 선거가 중요하겠지만 멀리 보면 우리 역사의 과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선거 과제가 어디로 가든 우리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기든 지든 역사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 할 보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우리는 할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답은 하나입니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성숙되지 않았습니다. 더 노력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만큼 발전할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말이지요. 단임제는 민주주의 후진국이 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뭐 객담이고요.

왜 민주주의인가? 저는 그동안 많은 사상을 공부하고 연구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많은 실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대 이후에 모든 사상은 결국 민주주의로 귀착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인권 존중의 사상이자 기술입니다. 인간을 위한 사상,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사상입니다. 민주주의는 경제발전에도 가장 적합한 제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친화적인 제도입니다. 경쟁, 자유와 다양성, 창의성에 적합한 제도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는 통합의 기술입니다. 민주주의는 분열과 투쟁으로 통합을 이루는 제도입니다. 이 모순된 얘기에 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주의 또는 전제왕권의 시대에는 반대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죽고 죽이는 반란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고 전쟁을 했습니다. 공존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민주주의는 분열하지만 분열해서 규칙에 따라 싸우고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분열로 통합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명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민주주의는 상대주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상대주의는 관용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상입니다. 민주주의 절차는 상호 인정과 토대 위에서 대화와 타협, 경쟁과 승복, 그리고 재도전의 기회 보장을 통해서 이견과 이해관계를 통합하는 상생의 정치기술입니다.

통합의 실질적 조건은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자면 복지와 기회의 균등이 필요하고 이런 사회를 만들려면 연대의 사상과 계층 간, 집단 간 세력 균형이 필요합니다. 지역 간 세력 균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층 간, 집단 간의 갈등은 대화와 타협으로 제3의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통합의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간 대결은 정서의 토대 위에 있고 논리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서 타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층 간, 집단 간에 세력 균형은 필요합니다.

어떻든 이와 같은 통합의 실질적 조건에 관한 인식은 진보의 사상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 그것은 진보주의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민주주의는 진보의 사상으로 귀결됩니다. 자유·평등·인권·국민주권 사상을 명실상부하게 실천하면 그것은 결국 진보의 사상이 됩니다.

진보란 무엇인가? 왕과 귀족이 누리던 권리를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누리는 사회로 인권이 확대되어 나가는 과정을 진보라고 항상 말해 왔습니다. 책에는 어떻게 쓰여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말해 왔습니다. 다만 진보의 전략이 비타협적 투쟁만을 고집하는 근본주의로 가면 결국 극단주의로 되어서 민주주의의 궤도를 벗어나게 됩니다. 상대주의의 궤도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민주주의는 평화의 기술입니다. 이것은 칸트라는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제도이고, 국민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를 하면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칸트의 평화론입니다. 그런데 칸트가 생각했던 그 민주주의는 고도의 민주주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어느 나라에도 실현된 적 없는 더 성숙한, 더 고도화된 민주주의라야 바로 이것이 가능할 것이거든요. 우리 한국에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민주주의 사상의 기본은 인간의 이성, 박애사상에 기초한 공존의 지혜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의 가치와 전략을 포괄하고 있는 바다와 같은 사상입니다. 민주주의는 완전한 사상인가? 민주주의에 대한 반대는 허용되지 않는가? 예,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를 완전한 사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주의 사상 자체에 모순되는 명제입니다. 바로 그 상대주의가 민주주의의 완전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관용성 때문에 민주주의는 완전할 수 있습니다.

신의 진리와 그 절대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도 신의 진리를 인식하고 해석하고 전달하는 사람의 능력과 품성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만 인정하면 민주

주의의 상대성을 수용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분들에게서 왜 자꾸 상대주의라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진리는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식 능력은 분명히 절대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또한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진화와 발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초 민주주의는 혁명과 쟁취의 시대에서 출발했습니다. 전제권력으로부터의 자유, 군주제 왕권과 독재에 맞선 인권을 위한 투쟁,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투쟁이 민주주의에 본분인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는 자유와 평등의 사상, 국민주권 사상이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핵심적 요소이고 저항권 사상이 많이 존중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 민주주의제도는 대의제도와 법치주의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혼란과 공포 정치, 그리고 제정의 등장과 몰락, 프랑스에서 이와 같은 실험을 많이 거친 다음 이제 민주주의가 승리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민민주주의와 대중의 소외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공화정의 수립, 국민주권의 시대가 열렸지만 권력에 대한 불신, 또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때문에 자유가 민주주의의 본질이 되었고 따라서 민주주의의 핵심은 권리장전, 법치주의와 같은 인권의 제도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 권력분립, 사법권의 독립 같은 제도가 중시되었습니다.

어쨌든 시민민주주의 시대에서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제도가 발전해 왔습니다만, 유산계급의 지배와 대중의 소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이후 무산계급이 등장하고 그로 인한 한바탕 소용돌이와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다시 민주주의가 확대 발전된 역사를 거쳤습니다. 유산계급의 지배와 지배에 대한 계급 투쟁이 등장했고 그에 따라 한쪽은 사회주의 혁명과 공산독재로 가고, 한쪽은 사민주의 체제로 갔지만 그 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파시즘의 등장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파시즘은 진작 몰락했고 공산주의는 한참 있다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선거권은 확대되고 국민 주권은 더욱 확대되었으며 민주주의는 아주 장족의 발전과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선거가 보편화되고, 보수와 진보가 각기 당을 만들어서 경쟁하는 비교적 성숙한 민주주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당의 등장과 견제의 원리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견제의 본질은 정당 간의 경쟁에 있는 것이고 임기가 있고 교대된다는 것이 가장 강력한 견제이기 때문에 오늘날 견제를 위해서 정부와 국회를 분리시켜야 된다, 이원화시켜야 된다, 말하자면 정부의 반대당에게 국회의 다수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과거 근대 초기 민주주의 시대의 이론을 오늘날 그대로 쓰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따로 또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만 책임지고 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선거로 심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견제인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제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해서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나라들이 성숙한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연정을 하고 있는 나라들의 민주주의가 대개 우리 민주주의보다는 한 단계 높은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 장래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민주주의가 성숙하면서 국민들은 점차 정치와 민주주의에 무관심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이른바 '적이 사라진 민주주의' 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파시즘도 한물가고, 공산주의도 한물가고, 냉전도 한물가고, 따라서 안보적 대결도 한물가고 나니까 민주주의의 적이 없고 국민정치에도 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로지 먹고사는 경제 문제에 매몰되고 개인의 취미생활이나 소시민의 행복에 매몰돼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민주주의의 위기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실제로 여론의 지배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여론은 언론이 지배하고, 언론은 시장을 지배하는 세력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주의는 가치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치는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이지만 시장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시장이 우리 정치를 지배하게 됐을 때 가치의 위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시장을 지배하는 사람의 정통성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언론의 정통성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그저 돈이 많은 것 외에는 다른 정통성이 없지 않습니까? 권력이 시장과 언론에게 분산되고 그 권력이 확대되면서 민주주의의 정통성에 위기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대안이 무엇입니까? 경제 문제에서 소비자 주권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참되기 어려운 일이라고 포기해 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결코 포기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의 각성된 행동, 단결된 행동은 상당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와 같이 대처하듯이 정치의 영역에서는 역시 시민민주주의, 시민주권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아무리 찾아보려고 노력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시민의 참여, 시민의 행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참여에 의한 참여민주주의가 답이다, 일단 저는 그렇게 답을 내고 있습니다.

노사모와 같은 운동, 시민주권운동이라는 것이 과연 될 수 있는 것인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제가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가겠습니다. 역사적 경험도 중요하고 논리적 판단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을 보면서 느낌으로 판단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직관이 중요한 것이지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노사모, 민주주의의 장래는 노사모에 있다, 노사모 안 하신 분들이 섭섭해할지 모르니까 민주주의의 장래는 참여포럼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

리고 싶습니다. 보다 정교하고 단단한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갑시다.

한국 민주주의는 투쟁의 시대를 걸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청산과 개혁을 통하여 적어도 형식적, 제도적 민주주의를 공고히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성숙한 민주주의, 그리고 내실이 있는 민주주의를 할 때입니다. 성숙한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통합의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실이 있는 민주주의는 바로 진보적 민주주의를 뜻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의 민주주의입니다. 지역주의 극복, 협상 민주주의와 같은 여러 가지 이름이 붙는 그런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입니다. 통합의 전략이 또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단계의 과제는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위기, 일반적 민주주의 위기에 대응해서 우리는 성숙한 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통합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새로운 민주주의가 바로 노사모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보편적 위기에 대한 보편적 대응으로 노사모를 말씀드렸던 것인데, 한국 민주주의의 과정에서도 또 한번 참평포럼을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권자로서 책임을 다합시다. 옛날에는 왕이 똑똑해야 나라가 편했습니다. 지금은 주권자가 똑똑해야 나라가 편하지 않겠습니까? 추종하는 시민에서 참여하는 시민으로 스스로의 위상을 바꿉시다. 그리고 시민은 선택합니다. 선택을 잘하는 시민, 그래서 지도자를 만들고 지도자를 이끌고 가는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제가 지금 엄청 구박을 받을 것입니다. 막판에도 대통령 짱짱하게 하고 가는 것이 다 여러분 덕분 아닙니까?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지도자와 시민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크고 작은 단위에서 많은 지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도자가 됩시다.

지도자가 되기 위한 조건과 지도자의 자질을 잠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나쁜 정치인이라도 정치인이 되는 조건, 그것은 정치력이 있어야 합니다. 말재주가 있어서 연설·대담·토론·선전·선동에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잘하면 됩니다.

조직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모으고 조직하고 이해관계를 나누기도 하고 대의를 나누기도 하고 조직하고 통솔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모여도 한 사람이 통솔을 해야 하거든요. 세 사람이 모여도 통솔해야 하고, 네 사람이 모여도 통솔자가 있어야 합니다. 통솔해야 합니다. 통솔자의 조건은 뭐냐? 보스형·장악력,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일단 지도자인 척하고, 지도자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 중에는 사람을 죽이는 지도자도 있고 사람을 살리는 지도자도 있습니다. 지도자를 잘못 따라가면 낭패 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력이 있는 지도자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도자가 될 때 판단력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판단력 있는 지도자는 작은 지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지혜도 발전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해박한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관념적으로 앉아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전략적으로 사고할 줄 아는 소위 전략적 사고력이 있어야 합니다.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물의 이치에 대한 사고를 통해 자기 가치를 뚜렷이 할 수 있고, 역사와 세기의 흐름을 읽고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저는 통찰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때때로 예언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민족을 구원하는 경우도 있지요. 판단력이 가장 높은 수준은 예언자적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격이 맞아야 됩니다. 성질 좋다, 이런 것이 아니고 지도자적 성격이 맞아야 합니다. 이것을 안 가진 사람한테 줄 잘못 서면 이것도 또 낭패를 봅니다. 남을 잘못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강한 소신과 신념을 갖춘 확신형 인간이라야 됩니다. 물론 절대주의는 안 됩니다. 지각없이 확신을 가지면 안 되고 통찰력 있는 확신, 타인의 위협이나 유혹을 이겨 낼 수 있는 용기, 마음속으로부터 솟구쳐 나오는 유혹을 이겨 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시에 결단할 줄 아는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결단만 하면 뭐합니까? 행동해야지요. 금방 결단했다 해 놓고 그 다음 날 '아이고,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더 밑에 그야말로 정치인이 아니고 지도자로서 합당한 품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품성을 갖추면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이지요. 지금 제가 설명한 순서는 나쁜 지도자부터 점점 좋은 지도자로 가고 있습니다. 별 볼일 없는 지도자에서부터 점차 좋은 지도자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부지런한 것을 보통 우리가 성실하다고 얘기합니다. 정직한 사람도 성실하다고 말하고 부지런한 사람도 성실하다고 말합니다.

정치인에게,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공정입니다. 옛날에 성공한 지휘자는 노획물을, 전리품을 공정하게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성질이 좋아도 공정하지 못하면 지도자로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많은 추종자를 아우를 수가 없습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적인 품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절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루 속에 칼을 쥐고 있기 때문에 절제해야 됩니다. 뭔가 좀 챙길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남을 신뢰할 줄도 알고 또 남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망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딱 쳐다보면 믿음이 가는 사람이 있고 안 가는 사람이 있는데, 잔머리를 복잡하게 굴리는 것은 신뢰성에 아주 해롭습니다. 얼굴 표정에 나타나거든요. 신뢰성, 책임성이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언론개혁 끝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품성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한마디로 묶어서 말하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하고 가까운 우리에게만 따뜻한 사람이 아니라 넓은 우리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점에서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제 스스로가 사람으로서 얼마만큼 느낌으로 사람답다는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데, 그런 노력을 하는 자세라도, 때때로 되돌아보는 자세라도 우리가 가지고 자신을 다듬어 나가면 그래도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뜻한 사람은 분노가 있는 사람이지요.

사람이 되기에 앞서서 바보가 됩시다. 제가 바보 전략으로 완전히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하여튼 여기 성공의 증거가 있으니깐요. 누가 바보냐? 이해관계를 셈할 줄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보통 바보라고 하거든요. 말귀는 잘 알아듣는데, 손해나는 일을 부득부득 하는 사람, 이게 바보지요. 당장 가까이 눈앞을 보면 이익이 따로 있고 대의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 보면 대의가 이익입니다. 그래서 눈앞의 이익을 볼 줄 모르는 바보가 되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손해나는 일만 계속합시다. 그렇게 사람을 모아 봅시다. 함께 토론도 하고 공부도 합시다. 그리고 스스로 지도자가 되려고 노력합시다.

전략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대세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대의로 대세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익이 대세를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의와 대세가 서로 충돌할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전략적 판단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대세를 거부하고 대의의 깃발을 외롭게 들어 관철하고, 어떤 때는 대세를 수용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판단은 민심이 합니다.

민심과 여론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민심은 두 가지입니다. 가까이 보는 민심, 이익을 따지는 영악한 민심이 있고, 역사와 대의를 수용하는 멀리 보는 민심이 있습니다. 용어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가까이 있는 것은 여론이라고 하고, 멀리 있는 것은 민심이라고 하면 좋을 것입니다. 여론 중에는 장래에 있어서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여론이 있고 지금은 나쁘지만 앞으로는 좋아지는 여론도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참 안타까운 것이 이번 기자실 개혁에 관해서 원칙의 입장에 서서 한나라당과 이 문제를 가지고 각을 세워 나가면 뭔가 의지가 있는 당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왜 열린우리당 사람들이 대의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눈앞의 여론이 험악한 것 같으니,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또 언제 한번 볼펜에 긁힐지 모르니까 적당하게 타협하고 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어도 국정홍보처를 폐지한다거나 하는 악수는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국민들 정말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한·미 FTA, 소수로 갔다가 결국 다수로 돌아와버리지 않았습니까? 전시작전통제권, 우리가 소수로 밀렸습니다. 밀렸는데 결국 다 돌아와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뚝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저 뚝심이 아니라 소위 통찰력을 가진 전략적 사고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고 민심의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훈련을 잘해야 됩니다.

무엇이 원칙이고 무엇이 전략인가? 원칙은 타협할 수 없는 것이고 전략은 타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는 것은 가치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민주주의 정도의 수준을 갖춘 가치 그 자체가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인 것이고 나머지는 타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FTA 같은 경우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 아니라는 것입니

다. 저는 이라크 파병까지 그렇게 봤습니다. 선택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협하지 못할 원칙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가 반독재 투쟁할 때 독재와 타협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 가치의 문제, 민주주의 가치에 관한 문제니까요. 인권 탄압, 고문, 이런 것은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상향식 민주주의를 하자고 그랬는데 당 내에서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싸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참정연이 그 문제를 가지고 내공을 많이 익혔고 결국은 타협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쪽 논리적으로 대통합을 할 이유가 아직은 없다, 그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했지만 저는 타협했습니다. 결국 분열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사가 분열로 망한 것 아닙니까? 우리 역사의 비극이 있었던 모든 계기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그 자체, 민주주의 원칙,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 이외의 것은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정연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상향식 투표권의 문제를 가지고 적절하게 타협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그것을 타협하고 여러분이 지켜 주기 때문에 적어도 대통령이라도 이 시점까지 어디 가서 초라하지 않게 일하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당 해체라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이지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적어도 전 당대회라도 하고 합의라도 보자, 그런 수준으로 타협했기 때문에 대통합을 수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통합하고 대세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엘리트주의를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을 보면 저는 아무것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제가 옛날에 경험했던 엘리트주의를 여러분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초선 국회의원 하던 시절에 추호도 타협하지 않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사람을 좀 우습게 보는 그런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무릅쓰고 손해 보면서, 바보 노릇 하면서 원칙을 관철하는 사람의 눈에 보통 사람들은 좀 우습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것

을 넘어서는 것이 사람이 된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선 조건을 가지고 살바 싸움을 하는데 작은 계산을 넘어서고 불리한 조건을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고 지금 이명박 씨도 그런 상황이 있었지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이 전략이 될 수 있지만, 마음속 깊이 그와 같은 전략일 때 전략을 뛰어넘을 수 있고, 원칙일 때 원칙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신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동안 그런 역량을 발휘할 기회도 없었고 그런 수련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가우똥가우똥하면서 저울질하던 사람들이 주변에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불쾌감이나 불신,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야 합니다.

장관을 지내고 나가서 감정 상한 일도 아무것도 없는데 오로지 대선전략 하나만으로 차별화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인가, 내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냥 제가 할 도리를 다한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적어도 국정운영에 대한 기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모으고 있는 사람들인데 내가 그쪽으로 민심이 몰릴까 봐 견제하는 것은 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도리를 다한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바보가 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덕적으로 나쁜 일을 한 일이 없고 또 국가전략, 국가정책에 크게 오류를 범한 일이 없는데 언론정책을 포함해서 민생을 하루아침에 왜도난마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지가 낮아서 그래서 지금 차별화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지가 그때보다는 조금 올랐으니까 다시 와서 줄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의 기회주의는 용납합시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절대 기회주의에 빠지지

답시다. 오로지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그러나 사람을 널리 포용하면서 걸어갑니다. 제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남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한 사람이 되라고 했었는데, 저도 실천 못하는 사람이지요. 저도 집에 가서 아내하고 싸우는데요. 그렇기는 하지만 꾸준히 그런 의식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시민에 의한, 시민주권사회 실현을 위한 참여운동을 가열차게 펼쳐 갑시다.